



## ‘적극행정’ 으로 4차 추경 집행속도 대폭 높인다!

-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간편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! -

- ▶ 소상공인 새희망자금, 행정정보를 통해 상당수 소상공인에게 별도 증빙 없이 지급
- ▶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재산기준 대폭 완화로 저소득층 코로나19 피해 가구 보다 넓게 지원
- ▶ 아동 특별돌봄 지원, 중학생까지 확대, 스쿨뱅킹 등 활용 신속 지급 등

###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라! 문재인 정부의 적극행정 본격 추진

- 정부는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국정 의 중심축으로서 적극행정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.
  - 문재인 대통령께서 “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소극행정을 문책할 것”을 지시(‘19.2)함에 따라, 국조실과 관계부처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(‘19.3)하는 등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.
  - ‘19년에는 ‘적극행정 운영규정’(대통령령) 제정, 전 기관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추진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.

### 준비된 적극행정 제도 코로나19 방역에 제대로 활용, K-방역 견인

- 올해 1월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전례를 뛰어넘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. 대통령께서는 “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.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”을 지시했습니다.(‘20.2 국무회의)
  - 정세균 국무총리도 “비상시국인 만큼 선 조치하고, 추후에 규정을 보완할 것”, “적극행정 면책” 등 적극행정을 지시했습니다.(‘20.3 중대본)

- 이에 각 부처와 지자체는 긴급한 대응에 장애가 되는 규정은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을 통해 대응했고,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.

\* 특히, 중앙부처·지자체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한 정책결정은 '19년 대비 7배 이상 증가

- 그 결과, △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△승차진료 방식 확산 △생활치료센터 도입 △마스크 등 방역물품 공급 △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 적극행정으로 K-방역에 기여하였습니다.

**하루가 시급한 국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  
적극행정으로 4차 추경의 집행속도 높인다.**

- 정세균 국무총리는 9.22일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9.23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“이번 추경은 속도가 관건”임을 강조하며,
- “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”할 것을 지시하였으며, “언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, 절차는 최대한 줄이며, 현장의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”을 당부하였습니다.
- 이에 따라 정부는 즉시 추경 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으며, 지급기준 완화, 행정절차 간소화,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등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
- 이번 추경이 추석 전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
- 정부는 4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행정을 실천합니다.

- **(소상공인 새희망자금)**<sup>중기부</sup>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100만원 ~ 200만원을 지원합니다.
  - 특히,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  
- **(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)**<sup>복지부</sup> 기존 복지제도나 他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.
  - 특히, 기존 긴급복지지원 대비 재산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여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·지원할 계획입니다.
  
- **(아동특별돌봄지원)**<sup>복지부·교육부</sup> 1차 추경 지원시 지원대상이었던 만 7세미만 아동에서 중학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으며, 집행의 신속성,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, 현금(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, 중학생 아동 1인당 15만원)으로 지급합니다.
  - 아동수당 수급계좌(미취학 아동), 스쿨뱅킹 계좌(초등학생) 등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중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며,
  - 대안학교·홈스쿨링 등 초·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 신청·접수를 거쳐 10월 중 지급합니다.

※ 다만,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지급대상에 추가된 중학생은 스쿨뱅킹 계좌 등록여부 조사 등 준비가 필요하여 추석 이후 빠른 시일내에 지급될 예정
  
- **(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)**<sup>중기부·금융위</sup>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최근 연체·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문제가 해소된 경우, 지원을 허용합니다.

- 또한,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, 심사항목 간소화를 통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**(특고·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)**<sup>고용부</sup>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소득 감소를 이미 입증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추석 전까지, 신규 신청자는 신속히 심사하여 1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.
- **(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)**<sup>중기부</sup> 8월 16일(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일) 이후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(50만원)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(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현장 온라인 접수 지원 병행)로 진행하며,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할 예정입니다.

**상반기 방역 적극행정 + 하반기 민생·경제 적극행정으로 위기 극복  
올해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는 한해로 만들 것**

- 정부는 작년에 구축한 제도를 바탕으로 올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,
  - 하반기에는 특히 민생과 경제 분야의 적극행정 성과를 만들어 나감으로써, 올해를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단단히 정착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.
-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, △10월 중순까지 차관회의에서 29개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진행하고 △11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△12월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추진하는 등
  - 코로나19 방역에서 쌓인 적극행정 경험을 발전시켜 전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,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.